

이 자료는 2006.2.17(금요일)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報 道 參 考 資 料	생 산 일	2006년 2월 17일
		생산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		담당과장	유광열(2110-2301)
		담 당 자	강부성(2110-2302)

題 目 : '06.2.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

-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.17일(금) 09:00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
 - 'u-IT839 전략', '제1차 중장기 철도 안전종합계획('06~'10)' 및 '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확대방안'에 대해 논의

【 u-IT839 전략 】

- 추진 배경
 - 04.2 참여정부의 정보통신 기본 정책인 IT839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
 - 그러나 IT환경이 유비쿼티스化되고 IT839 전략이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품목 재조정 및 추진전략 조정을 통해 u-IT839 전략으로 업그레이드 추진

주요 내용

① 품목 재조정

- (8대 서비스) 인터넷 전화는 상용화됨에 따라 제외, DMB와 DTV는 통합, 통방융합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'광대역 융합서비스'와 'IT서비스' 추가
- (3대 인프라)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광대역통합망에 통합하는 대신 '소프트 인프라웨어' 추가
- (9대 신성장동력)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를 통합하고 RFID/USN*기기를 추가

* 사물에 센싱, 컴퓨팅 및 통신기능 갖는 태그(RFID :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처리·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(Ubiquitous Sensor Network)

② 추진전략 수정

- u-IT839 상용화 단계 본격 진입에 따라, 기존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중심에서 시장 활성화로 기조 전환
- SW 및 IT부품·소재 정책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통신·방송 융합 및 산업간 컨버전스 촉진으로 블루 오션 창출
- 글로벌 IT 리더쉽 확보를 통한 u-IT839 해외 진출 본격화

□ 전망 및 기대효과

- '10년까지 u-IT839 관련 생산이 연평균 14.2%씩 증가하여 향후 5년간 총 생산액은 576조원, 경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액은 총 266조원 전망
- 광대역통합망(BcN) 완성 등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조기 진입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기대

【제1차(2006~2010) 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】

□ 추진배경

- 철도안전법 시행('05.1.1)에 따라 철도부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('06~'10) 「철도안전종합계획」 수립
- 철도종사자·철도시설·차량·위기관리·안전시스템 및 연구개발 등 6개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(77개) 발굴
 - 사고 후 재발방지책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'사전에방의 원칙'을 적용하여 일상적 안전관리 및 투자에 초점

□ 주요내용

①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

- '06년 하반기부터 기관사의 자질개선을 위한 '운전면허제'를 시행하고, 관제사 신체검사(2년주기)·적성검사(10년주기) 강화 등

* '06.11월 제1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실시(300여명)

②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

- '10년까지 전국 466개 철도건널목을 입체교차화(건널목개소 감소 1,537→1,071)
- 사고예방을 위해 선로변 울타리(201km) 설치 및 승강장 스크린 도어(131개소)·안전펜스(175개소) 등 단계적 확충 등

③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

- 20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,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개조·성능 개선 등

*'10년까지 노후대체 수요 : 1,072량(전동차 720량, 화물차 352량)

④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 감독 강화

-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실태에 대해 2년마다 종합심사 실시
-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설비기준,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 규격화 등 위험물 운송시 안전관리지침 규정화('06) 등

⑤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

- 고속철도 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('06) 하고, 유관기관을 포함한 종합훈련(연1회이상) 정례화

⑥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

- 강풍, 낙석 등 재해 대비 선로구축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도건널목 신호체계 연동 등 지능화시스템 개발 등

※ 동 안건은 건교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【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방안】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, 민자유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왔으며 바우처 제도는 최근 들어 도입에 관심을 갖기 시작
- 그러나 OECD 선진국에 비해 대상분야, 운영방식 등이 제한되어 있고 체계적인 추진시스템도 미구축

	아웃소싱	바우처	민자유치
우리 나라	▪ 단순업무 위주로 적극 활용('99~'05년간 예산 연평균 24% 증가)	▪ 문화공연 관람, 직업 훈련 등 일부 분야에서 활용(아직 '걸음마 단계')	▪ SOC외에 학교, 문화 시설 등에도 활용
OECD 선진국	▪ 단순업무외에 정부 고유업무에서도 활용	▪ 사회복지·주택 등의 분야에서 활용	▪ 상 동

□ 개선 방안

① 정부 전체 직무분석을 통해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

- 아웃소싱 : 법률자문, 재무·회계 등 전문분야로 확대 검토
- 바우처 : 주택, 정보화 분야 등의 분야에 도입 검토
- * 민자유치 제도는 활발한 이용단계이므로 운영 내실화에 초점

② 운영방식 다양화

- 아웃소싱 : 민간끼리의 경쟁 → 민·관 경쟁시스템으로 전환
- 바우처 : 쿠폰 지급/미지급, 비용환급 등 여러 형태로 도입

③ 추진시스템 구축

- '시장원리 확대 위원회' 설치(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)
- 법·제도적 기반 마련(국가재정법, 예산집행지침 등에 지원근거 규정)

□ 추진 일정

- '06년중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'07년부터 1단계 확대 도입

【 참고 】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

- 일시·장소 : 06.2.17(금) 09:00~,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
- 참석 : 총 15명
- 경제부총리(주재), 농림부·신자부·정통부·환경부·노동부·여성가족부 장관, 공정거래위 위원장, 과기부·문화부·건교부·예산처 차관, 국조실 정책차장, 금감위 부위원장, 교육부 차관보

※ 별첨

- u-IT 839 전략 (정통부)
- 제1차('06~'10)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 (건교부)
- 공공부문에서의 시장원리 확대방안 (기획예산처)

※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, 실제 회의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.

‘u-IT 839 전략’ 관련

자료 생산: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TEL : 2110-2312, 2313

(과장 이 철, 사무관 박홍진)

‘제1차(’06~’10)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’ 관련

자료 생산: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TEL : 2110-2319, 2323

(과장 전병조, 사무관 고영호)

‘공공부문에서의 시장원리 확대방안’ 관련

자료 생산: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TEL : 2110-2240, 2522

(과장 윤종원, 사무관 김동익)

財 政 經 濟 部

政 策 弘 報 管 理 室 長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u-IT839 전략 (안)

2006. 2. 17

정 보 통 신 부

목 차

I. 한국 IT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	1
1. 국내 IT산업의 현 위상	1
2. IT강국 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도전	2
II. IT839 추진 성과와 평가	3
1. 추진경과	3
2. IT839 추진성과와 평가	4
III. u-IT839 추진 전략	7
1. 전략품목 재조정	7
2. u-IT839 목표 및 추진 전략	12
① 기술 중심에서 시장 활성화로 정책기조 전환	
② 소프트웨어 및 IT부품·소재 정책 우선순위의 강화	
③ 산업간 컨버전스 적극 대응으로 블루 오션 창출	
④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	
IV. 기대 효과	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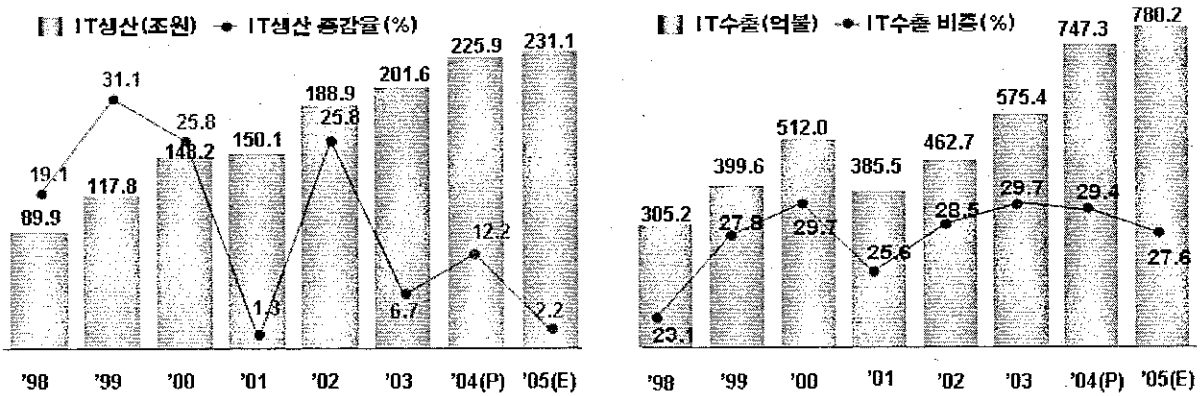
I. 한국 IT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

1. 국내 IT산업의 현 위상

□ IT산업은 IMF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,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산업군으로 부상

○ '98~'05년 연평균 경상 GDP 증가율 7.5%를 상회하는 14.4% 성장

<그림 1> 국내 IT산업 생산 및 수출 추이



※ 자료 : 정보통신산업협회(KAIT)

○ '05년 IT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7.6%를 차지하고, 휴대전화, 반도체, 디지털TV 등이 수출 주력품목으로 확고히 정착

- '05년 IT수지 흑자액은 337억불로 전체수지 흑자의 88.7% 차지

※ IT무역 비중 및 IT수지 흑자 비중이 OECD 1위(OECD STI Scoreboard 2005)

□ IT산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9.1%에 달하는 GDP 성장기여율을 시현하며, IT산업의 GDP 비중이 '05년 15.1%로 확대

<표 1> IT산업의 대 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

	'00년	'01년	'02년	'03년	'04년	'05년
GDP 비중(%)	9.5	10.1	11.1	12.3	14.2	15.1
성장기여율(%)	32.1	25.2	26.3	51.3	53.5	39.2

※ 자료 :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한국은행, '05년은 1~3분기 평균치

○ '00~'04년 중, 연평균 소비자물가의 0.22%p, 생산자물가의 1.15%p를 하락시킴으로써 물가 안정에도 크게 공헌

※ 동 기간 중,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.2%, 생산자물가 상승률 1.8%(한은)

2. IT강국 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도전

- 가트너, IDC 등은 '06~'09년 간 세계 IT지출(IT Spending) 예상 증가율이 4%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

<표 2> 세계 IT지출 증가율 전망 추이

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
가트너 전망(%)	7.8	4.8	4.3	4.1	4.1
IDC 전망(%)	5.5	4.9	4.7	4.4	4.1

※ 자료 : IDC Black Book(2005), Gartner Dataquest Market Databook(2005)

- 국내 IT산업이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IT기기 분야는 '05~'09년 간 연평균 2.8%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, 상대적으로 취약한 SW 및 서비스 분야는 5.7%의 고성장 전망
-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IT 선도국가(leading player)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도전이 점차 표면화
 - 선진국의 경우, 메모리, 이동통신 등 첨단 IT기술 분야 (high-end)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가시화
 - ※ '05.11월 인텔-마이크론, 낸드 플래시 합작 발표, '05.8월 쉐일컴, 플라리온 인수
 - 중국 등 후발국의 경우, 범용 IT기술 분야(low-end)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축소
 - ※ 한중 IT기술 격차 : ('03) 2.67년 → ('04년) 2.16년(IITA, '04.11월 조사)
- 대내적으로는 IT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부품·소재 역량 강화가 시급
 - 지식경제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SW 경쟁력 취약
 - ※ SW 15.5, 통신방송기기 7.2, 반도체 4.7, 제조업 평균 9.7('00년 고용표)
 - 제조업 평균보다 30~50% 가량 높은 IT제품 수입유발계수로 인해 IT생산·수출 증가의 산업 파급효과가 제한적
 - ※ 휴대전화 0.49, 컴퓨터 0.55, 반도체 0.53, 제조업 평균 0.37('00년 산업연관표)

◇ 국내·외 IT환경 변화에 대응하여, 기존 IT839 전략을 더욱 스피드하고 소프트(Speed & Soft)하게 업그레이드 추진
 ⇒ 컨버전스 및 유비쿼터스 IT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 촉진과 함께, SW, 부품·소재 경쟁력 강화에 초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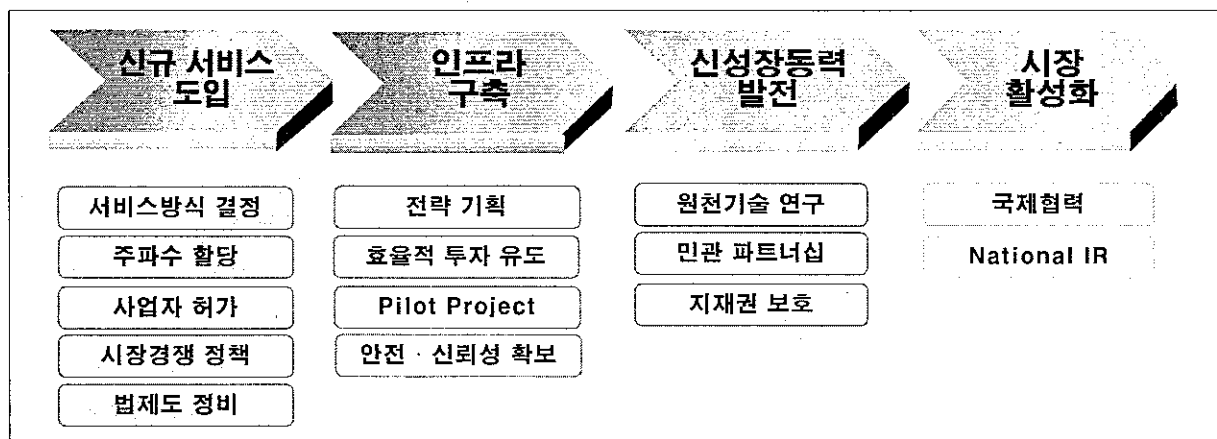
II. IT839 추진 성과와 평가

1. 추진 경과

참여정부 출범 초기,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,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IT산업 정책비전으로 IT839 전략을 수립·추진('04.2월~)

- '02년말~'03.8월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5~10년 후 미래 성장을 견인해 나갈 IT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
 - '02년말 IT산업 종합발전계획 상의 50개 차세대 유망품목에 기초하여 '03.3월 기기, 부품, SW 분야 9대 IT신성장동력 선정
 - 민관 합동 IT신성장동력기획단('03.4)을 통해 품목별 비전 및 전략을 구체화하고, '03.8월 **Broadband IT Korea** 추진전략 확정
 - 성과 중심의 R&D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정부 최초로 PM(project manager) 제도를 도입('03.6)하고, 핵심 기술개발 주체인 한국 전자통신연구원(ETRI)의 조직을 전면 개편('04.1)
- '04.2월,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산업의 선순환 발전 전략으로서 IT839 전략 수립
 - IT산업 가치사슬에 따라 기존 「광대역통합망 + 9대 신성장동력」 발전모델을 8대 서비스, 3대 인프라 부문까지 확장·체계화

<그림 2> IT산업 가치사슬과 정부의 역할



2. IT839 추진 성과와 평가

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(catch-up) 발전모델에서 탈피하여, 세계 IT시장을 선도(leading)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 마련

□ 유비쿼터스 IT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

- 세계 최초로 WiBro,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, 차세대 이동통신, 모바일 방송 등 첨단 IT기술 주도권 확보

※ 지상파 DMB : 유럽정보통신표준기구(ETSI) 이동형 방송 표준 채택('05.7)
WiBro :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(IEEE) 802.16e 표준 채택('05.12)

- 조달, 물류, 국방 등 12개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을 통해 RFID 시장 확산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('05년 국산화율 88%) 하고, 지능형 로봇 시제품 7종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착수

□ IT선순환 발전을 견인할 신규 서비스의 차질없는 도입

- 사전 공표된 일정에 따라 '05년말 인터넷 전화 도입을 마무리 하고, '06년 상반기 WiBro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 완료
- '04.7월, 지상파 DTV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하고, '05.5월 위성 DMB에 이어 '05.12월 지상파DMB 상용 서비스 개시
- 텔레매틱스, 홈 네트워크 분야 시범사업 추진, 교통정보통합 시스템 구축('05.12) 등 각종 융합 서비스 시장 형성에 주력

□ 글로벌 IT 위상 강화와 유비쿼터스 IT 허브 도약기반 구축

- '05년 선진 40개국 중 ITU 디지털기회지수 평가 1위
- ITU Telecom Asia('04.9), APEC 정상회의('05.11)에서 성공적인 IT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, 글로벌 R&D 센터 10개 유치
- ※ Intel, Fraunhofer IGD, IBM, Siemens, HP, Agilent, Microsoft, Sun, On-Semi, AMD
- 유비쿼터스 IT 허브를 지향하는 송도 u-IT 클러스터('05.11), SW 및 콘텐츠 산업 중심지인 누리꿈스퀘어('05.9) 조성 착수

<참고 1>

IT839 전략 분야별 성과

전략 분야		추진 성과
8	WiBro	사업자 선정('05.1), 부산 APEC 성공적 시연('05.11)
	DMB(위성/지상파)	위성 DMB 상용화('05.5), 지상파 DMB 상용화('05.12)
	홈 네트워크 서비스	홈 네트워크 시범사업('03.12~), 건물인증제(안) 마련('05.12)
	텔레매틱스 서비스	교통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('05.12)
	RFID 활용 서비스	태그가격 하락 및 국산화율 제고: ('04) 2000원, 26% → ('05) 500원, 88%
	W-CDMA	서비스 커버리지 확대: ('04) 9 → ('05) 23 → ('06) 84개시
	지상파 DTV	전국 154개 DTV 방송국 허가 완료('05.10)
	인터넷 전화	기간 VoIP 사업자 허가('05.7) 및 서비스 개시('05.11)
3	BcN	BcN 시범 서비스('05.9), 50~100M급 가입자 312만('05.12)
	USN	433MHz 능동형 태그/리더 개발('05.2), USN 현장시험('05.12)
	IPv6	세계 3위 수준의 IPv6 주소 4,145개 확보('05.11)
9	차세대 이동통신 기기	WiBro IEEE 국제표준 채택('05.12)
	디지털 TV/방송 기기	지상파 DMB ETSI 표준 채택('05.7)
	홈 네트워크 기기	디지털 CATV용 미디어 서버('05.6), UWB 기반 무선1394 플랫폼('05.12)
	텔레매틱스 기기	개방형 LBS 플랫폼 3.0 기술개발('05.11)
	차세대 PC	플렉시블 고성능 태양전지('05.7), Wearable PC 시제품('05.12)
	지능형 로봇	로봇 7종 개발 및 가정용 시범서비스 착수('05.10)
	IT SoC	이동통신용 저전력 핵심 IP 개발('05.12)
	임베디드 SW	10KB 미만 나노 운영체제 개발('05.12)
디지털콘텐츠	조연급 디지털 액터('05.8), DRM 연동기술 표준화('05.12)	

〈 IT839 종합 평가 〉

□ IT839는 우리나라 IT산업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으로서, IT산업의 미래 좌표를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IT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

※ IT839 전략은 IT산업 가치사슬에 따라 한국 IT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책 프레임워크(a policy framework)

- 대기업, 중소기업, 연구소, 대학 등 국내 60만 IT산업 종사자들이 IT839를 통해 IT산업의 비전과 목표, 로드맵을 공유하며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·외 시장 기회를 포착
- 이를 통해, 2~3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0년까지 60조원에 달하는 생산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WiBro, DMB, RFID 등 새로운 성장동력 가시화에 성공

<표 3> WiBro · DMB · RFID · 텔레메틱스 생산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	'05년	'07년	'10년	'05~'10년 생산 합계	'05~'10년 CAGR
WiBro	-	12,952	39,715	129,359	23.6
DMB	2,043	29,257	114,546	303,009	123.8
텔레메틱스	4,682	13,053	21,522	84,376	35.7
RFID/USN	2,902	9,450	38,000	96,633	67.3

※ 자료 : KISDI, ETRI, 관련 서비스 및 기기 생산전망 합계액

- 하지만, 일부 전략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및 IT부품·소재 분야 경쟁력 강화, 컨버전스 확산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
- 기존 IT839 전략이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본격 진입하고, IT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-IT839 전략으로 업그레이드 추진
- 「서비스 - 기기 · 부품 - SW · 콘텐츠」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

Ⅲ. u-IT839 추진 전략

1. 전략 품목 재조정

기본 방향

- '03.8월 「신성장동력 선정 기준」에 따라 기본골격이 마련된 기존 IT839 전략 품목구성(portfolio)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관련 민간투자도 진행 중
 - 따라서, 품목 재조정은 기존 8-3-9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, 그동안의 IT기술·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추진
- 「서비스 → 인프라 → 신성장동력」으로 이어지는 각 부문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, 8-3-9 부문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품목을 조정
 - 「서비스」는 IT산업 발전의 촉발자(trigger), 「인프라」는 지식기반경제의 사회간접자본(SOC), 「신성장동력」은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의 성장동력(cash cow)으로 개념화
 - ※ BcN 등 3대 인프라는 산업 개념이 아닌 경제 전체의 공통 기반으로 접근
- 단말 융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, 일부 품목을 통합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SW 전 분야를 8-3-9 라인업에 포함
 - 8대 서비스 부문은 산업간 컨버전스 등 미래 진화방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, 9대 신성장동력은 새로운 성장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품목을 확대·조정
- 앞으로도 IT기술·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품목 재조정과 전략 보완(rolling plan)을 통해 u-IT839 전략을 한국 IT산업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·발전

□ SW강국 도약을 위해 SW산업 전 분야를 u-IT839에 포함

- 「서비스 → 인프라 → 신성장동력」 가치사슬에 따라, 「IT 서비스」(SI, 컨설팅 등), 「소프트 인프라웨어」(공통 SW기반)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, 기존 「임베디드 SW」 및 「디지털콘텐츠/SW 솔루션」과 함께, SW 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된 라인업 구성

<그림 3> u-IT839 전략 품목



□ 8대 서비스 부문의 경우, 미래 기술진화의 방향을 포함하고 컨버전스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품목을 조정

- 기존 W-CDMA를 「HSDPA/W-CDMA」로 변경하고,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DMB와 지상파 DTV를 「DMB/DTV 서비스」로 확대·통합
- 통신·방송 융합, 나아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할 핵심 서비스 요소인 IP 미디어를 「광대역통합망」(BcN)에서 분리, 「광대역 융합 서비스」를 새롭게 추가하여 수용
- 인터넷전화(VoIP)의 경우, 이미 서비스 도입이 완결('05.11)되어 경쟁적 시장이 형성되고, 다양한 결합 서비스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8대 서비스에서는 제외

○ 기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거·지역 기반 정보활용 서비스를 포괄하는 「u-Home 서비스」로, 텔레매틱스를 「텔레매틱스/위치기반서비스」로 확대·조정

□ 3대 인프라 부문에서 기기, 서비스 등 산업적 요소를 추출하여 9대 신성장동력 또는 8대 서비스 부문에 각각 포함

○ 「u-센서 네트워크(USN)」의 칩, 태그, 리더기 등 기기적 요소를 「RFID/USN 기기」를 신설하여 이동

○ 「광대역통합망」(BcN)의 기기적 요소를 기존 홈 네트워크와 통합하여 「광대역/홈 네트워크 기기」로 하고, IP 미디어 등 서비스 요소들은 「광대역 융합 서비스」로 이동하는 한편, 기존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(IPv6)는 「광대역통합망」에 통합

※ 3대 인프라의 경우,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유·무형 자본스톡(capital stock)으로서, 국민경제 차원의 최적화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

□ 9대 신성장동력의 경우,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

○ 단말 융합 가속화에 따라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를 통합, 「이동통신/텔레매틱스 기기」로 하고, 유선 기반 통신기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「광대역/홈 네트워크 기기」로 명칭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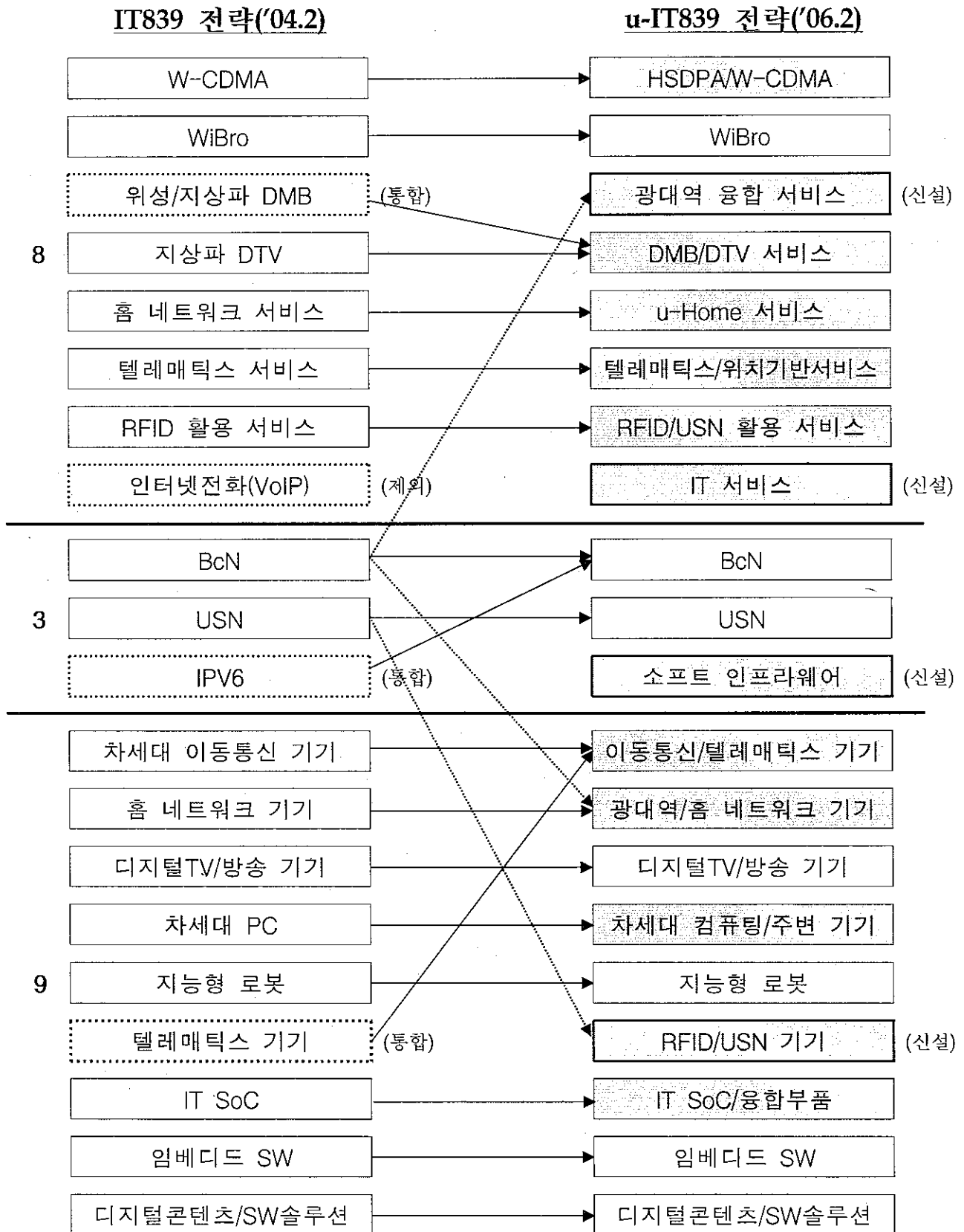
○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컴퓨팅 분야의 성장활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PC를 「차세대 컴퓨팅/주변 기기」로 확대

○ 시스템과 연계한 IT부품·소재의 체계적 발전과 IT-BT-NT 융합부품의 육성을 위해 IT SoC를 「IT SoC/융합부품」으로 확대하고, 「RFID/USN 기기」를 새롭게 추가

□ 기타 8-3-9 품목 배열도 「통신 → 방송 → 융합」 및 「서비스 → 인프라 → 신성장동력」 연계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

<참고 2>

전략품목 재조정



<참고 3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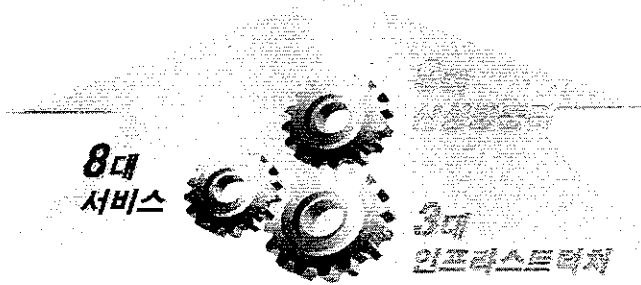
품목별 개념 및 포괄범위

전략 분야	개념 및 포괄 범위	
8	HSDPA/W-CDMA	비동기식 3G 이동통신 서비스
	WiBro	휴대 인터넷 서비스, WiBro Evolution
	광대역 융합 서비스	IP 미디어 서비스
	DMB/DTV 서비스	이동형 및 고화질(HD) 디지털 방송 서비스
	u-Home 서비스	홈 네트워크 기반 주거·지역형 정보활용 서비스
	텔레매틱스/위치기반서비스	교통 및 위치정보 기반 이동형 정보활용 서비스
	RFID/USN 활용 서비스	무선인식(RFID) 및 u-센서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
	IT 서비스	애플리케이션 개발/시스템 통합/컨설팅/아웃소싱 등
3	BcN	광대역 통합망
	USN	u-센서 네트워크
	소프트 인프라웨어	최적 IT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공통 SW 기반
9	이동통신/텔레매틱스 기기	이동통신, WiBro, 텔레매틱스 시스템 및 단말
	광대역/홈 네트워크 기기	FTTx, xDSL, 케이블 전송 기기 및 모뎀, 홈 네트워크 기기
	디지털TV/방송 기기	디지털TV, 셋탑박스, PVR, DMB
	차세대 컴퓨팅/주변 기기	서버, 휴대형/웨어러블 컴퓨터, 저장장치 등 주변기기
	지능형 로봇	지능형 서비스 로봇
	RFID/USN 기기	RFID 칩, 태그, 리더 및 센서, 센서노드
	IT SoC/융합부품	시스템 LSI, 일반 및 융합 부품
	임베디드 SW	임베디드 OS 및 애플리케이션
	디지털콘텐츠/SW솔루션	디지털콘텐츠/패키지 SW

2. u-IT839 목표 및 추진 전략

정보통신 일등국가 Dynamic u-Korea

상용화 촉진 및 해외진출 본격화로 유비쿼터스 IT 신성장 견인
- HW와 SW, 시스템과 부품 동반 성장 유도 -



추진 전략

- ① 기술 중심에서 시장 활성화로 정책기조 전환
- ② 소프트웨어 및 IT부품·소재 정책 우선순위의 강화
- ③ 산업간 컨버전스 적극 대응으로 블루 오션 창출
- ④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



상용화 촉진

8대 서비스

- HSDPA/W-CDMA
- WiBro
- 광대역 융합 서비스
- DMB/DTV 서비스
- u-Home 서비스
- 텔레매틱스/위치기반서비스
- RFID/USN 활용 서비스
- IT 서비스



투자활성화

3대 인프라

- 광대역통합망 (BcN)
- u-센서 네트워크 (USN)
- 소프트 인프라웨어



R&D성과 확산

9대 신성장동력

- 이동통신/텔레매틱스 기기
- 광대역/융 네트워크 기기
- 디지털TV/방송 기기
- 차세대 컴퓨팅/주변 기기
- 지능형 로봇
- RFID/USN 기기
- IT SoC/융합부품
- 임베디드 SW
- 디지털콘텐츠/SW솔루션

IT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품목 재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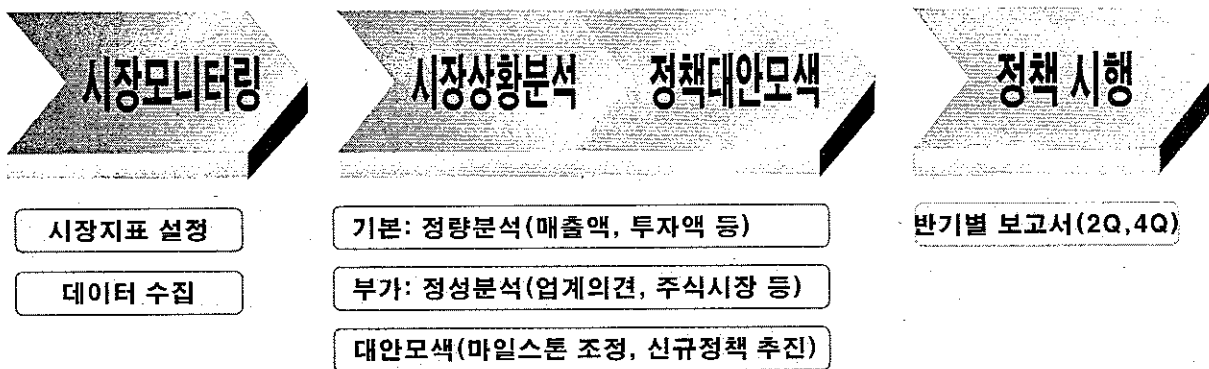
u-IT839 추진 전략

- ◇ u-IT839 상용화 단계 본격 진입에 따라, 기존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중심에서 시장 활성화로 기조 전환
- ◇ SW 및 IT부품·소재 정책 우선순위를 강화하고, 통신·방송 융합 및 산업간 컨버전스 촉진으로 블루 오션 창출
- ◇ 글로벌 IT 리더십 확보를 통한 u-IT839 해외 진출 본격화

1] 기술 중심에서 시장 활성화로 정책기조 전환

- '06년 중 8대 서비스 도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, 「서비스 + 기기·부품 + SW·콘텐츠」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
-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,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탄력적으로 도출하여 적기에 시행

<그림 4> u-IT839 시장 모니터링 체계



- 국가·사회 시스템 혁신을 위한 대규모 u-Korea 선도과제 발굴·추진으로 u-IT839 초기시장 수요를 적극 확충

2] 소프트웨어 및 IT부품·소재 정책 우선순위의 강화

- 「IT 서비스 → 소프트웨어 인프라웨어 → 임베디드 SW, SW솔루션, 디지털콘텐츠」로 이어지는 SW 가치사슬 전반을 집중 관리

- IT서비스 기업이 新산업 형성자(industry shaper)로서 산업간 컨버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화·대형화를 유도
- 임베디드 SW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Flagship project 추진하고 공개 SW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, WiBro, DMB 등 신규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
- 완제품(set)에서의 경쟁우위를 적극 활용, IT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연관 확대의 핵심고리인 IT부품·소재 경쟁력 강화 추진

③ 산업간 컨버전스 적극 대응으로 블루 오션 창출

- 시장 포화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통신·방송 융합의 핵심 서비스인 「광대역 융합 서비스」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산업간 컨버전스를 가속화
- u-Health, 홈 오토메이션, u-City 등 홈 네트워크 기반 주거·지역형 정보활용 서비스 및 「텔레매틱스/위치기반서비스」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등 각종 비즈니스 기반 정비
- 교통, 물류, 국방, 조달 등 전 산업 분야의 RFID, 센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u-센서 네트워크(USN)의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, 컨버전스를 선도할 IT-BT-NT 융합 분야 R&D 확대

④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

- 세계 IT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에 슬기롭게 대처
 - 국제 통상규범에 적합한 산업정책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, 지적 재산권 관리, 기술유출 방지 등 정책 대응 강화
- 긴밀한 민관 파트너십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,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
- 통신서비스 - 기기·부품 - SW·콘텐츠업체 동반진출 적극 유도

<참고 4>

u-IT839 전략분야별 장·단기 목표

전략 분야		2006년 목표	2010년 목표
8	HSDPA/W-CDMA	W-CDMA 망 전국 84개시 확대, HSDPA 개시	500만 가입자 확보
	WiBro	WiBro 상용서비스 개시, 망 구축 확대	800만 가입자 확보
	광대역 융합 서비스	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	세계 최고의 광대역 융합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
	DMB/DTV 서비스	DMB 및 DTV 전국망 완성	DMB 1,500만 이용자 및 DTV 1,000만대 이상 보급 달성
	u-Home 서비스	홈 네트워크 상용서비스 개시	u-Home 서비스의 세계적 모델국가 도약
	텔레매틱스/위치기반서비스	텔레매틱스 가입자 100만명 확보	500만 가입자 확보
	RFID/USN 활용 서비스	대규모 선도사업 및 모바일 RFID 상용화 추진	세계시장 점유율 7% 달성
	IT 서비스	대형 IT 국책사업 발굴 및 SW 공공구매제도 개선	세계 100대기업 4개사 육성
3	BcN	500만 규모 가입자망 확보	2000만 규모 가입자망 확보
	USN	범 정부 RFID/USN 추진체계 마련	세계 최고의 u-Life 환경 구축
	소프트 인프라웨어	8대 서비스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	최적의 IT 융·복합 서비스 환경 구현
9	이동통신/텔레매틱스 기기	50Mbps급 와이브로 상용시스템 개발	4세대(4G) 시제품 개발
	광대역/홈 네트워크 기기	개방형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개발	멀티미디어 QoS 보장 BcN 기술 개발
	디지털TV/방송 기기	양방향 DMB 송수신 시스템 개발	2세대(2G) DMB 기술 개발
	차세대 컴퓨팅/주변 기기	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	차세대 PC 세계시장의 10% 점유
	지능형 로봇	100만원대 국민로봇 출시	세계 3대 지능형 로봇 강국 진입
	RFID/USN 기기	RFID 리더 SoC 탑재 휴대단말 개발	5센트 태그 상용화
	IT SoC/융합부품	휴대전화용 저전력 영상처리 칩 개발	IT SoC 및 부품 3대 선진국 도약
	임베디드 SW	로봇, 텔레매틱스 제품에 탑재	세계 2대 임베디드 SW 강국 도약
	디지털콘텐츠/SW솔루션	데스크탑 분야 공개SW 보급 확산	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 실현

IV. 기대 효과

□ 시장 중심의 u-IT839 추진으로 IT 신성장 시대 개막

-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본격 진출을 통해 2010년까지 u-IT839 전략 분야 연평균 14% 대 성장 전망

<표 7> u-IT839 생산 전망('05~'10)

(단위 : 억원)

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05~'10 CAGR
8대 서비스	130,897	148,982	173,444	208,858	247,730	281,288	16.5%
9대 신성장동력	621,950	714,557	815,253	935,849	1,053,926	1,180,425	13.7%
총계	752,847	863,538	988,698	1,144,707	1,301,656	1,461,713	14.2%

※ 자료 : IITA, ETRI, KISDI 종합

- 이를 통해, '06~'10년간 생산액(누계) 576조원, 경제 전반에 걸쳐 266조원(누계)에 달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

□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조기 진입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

- 통신·방송·인터넷이 융합되는 광대역통합망(BcN) 완성

<표 8> 광대역통합망 추진 목표

(단위 : 가구/가입자)

	기반조성 단계 ('04~'05)	본격확산 단계 ('06~'07)	구축완성 단계 ('08~'10)
유선 50~100Mbps급	256만	570만	1,000만
무선 평균 1Mbps급 보장	56만	250만	1,000만
총계	312만	820만	2,000만

※ 자료 : 정보통신부

- 지속적인 RFID 투자 유도과 u-IT 클러스터 조성으로 USN을 조기 구축하고, 편리한 IT이용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충

u-IT839 전략을 통해 2010년 디지털 컨버전스 및 유비쿼터스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IT 신성장 모델 국가로 도약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제1차(2006~2010)
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

2006. 2. 17

건설교통부

《 목 차 》

1. 계획의 수립배경	1
2. 철도사고 현황 및 문제점	1
3.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	3
4. 주요 추진과제	5

< 참고자료 >

1) 철도안전종합계획 투자소요	8
2) 철도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	9
3) 주요 성과지표	10
4) 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	11

1. 계획 수립배경

- 철도안전법 시행('05.1.1)에 따라 철도부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('06~'10) 「철도안전종합계획」 수립
- 철도사고는 지속적인 시설개량과 안전설비 투자 확대 등 안전 확보 노력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
 - ※ 최근 10년간 철도사고 53%(1,681→616건), 사망자 37%(398→249명) 감소
 - 철도구조개혁 시행 · 고속철도 개통 · 도시철도 운행증가 등 철도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철도안전 위협요인 증가
 -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필요

2. 철도사고 현황 및 문제점

□ 철도사고 현황

- 지난 10년간('95~'04년) 철도사고는 53%(1,681→788건) 감소
 - 일반철도는 62%(1,616→616건) 감소하였으나, 도시철도는 노선이 2.1배(167.4→358.6km) 증가하면서 사고도 2.6배(65→172건) 증가
 - ※ 10년간 도시철도 이용시민의 자살사고는 5배이상 증가(13→69명)

《 최근 10년(1995~2004) 철도사고 현황 》

(단위:건)

구 분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
철도사고	1,681	1,228	1,081	1,085	858	755	706	703	908	788
- 일반철도	1,616	1,151	1,016	986	761	636	576	596	710	616
- 도시철도	65	77	65	99	97	119	130	107	198	172

- 10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,
 - 열차충돌·탈선사고는 86.7%(15→2건), 건널목에서 자동차와 충돌 등 건널목 사고는 86.2%(282→39건) 감소
 - 선로 무단횡단, 승강장 추락 등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'01년 까지 대폭 감소(1,384→642건)하다, '02년부터 상승('04년 747건)

《 철도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》

(단위:건)

구 분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
계	1,681	1,228	1,081	1,085	858	755	706	703	908	788
열 차 사고	15	6	5	8	6	6	4	2	5	2
건널목사고	282	172	116	116	95	75	60	57	61	39
사상 사고	1,384	1,050	960	961	757	674	642	644	842	747

-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37%(398→249명) 감소
 - 철도의 대량수송 특성상, 철도사고시 대형 인명피해 유발
 - ※ '03. 2.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(사망 192명, 부상 147명)

□ 안전관리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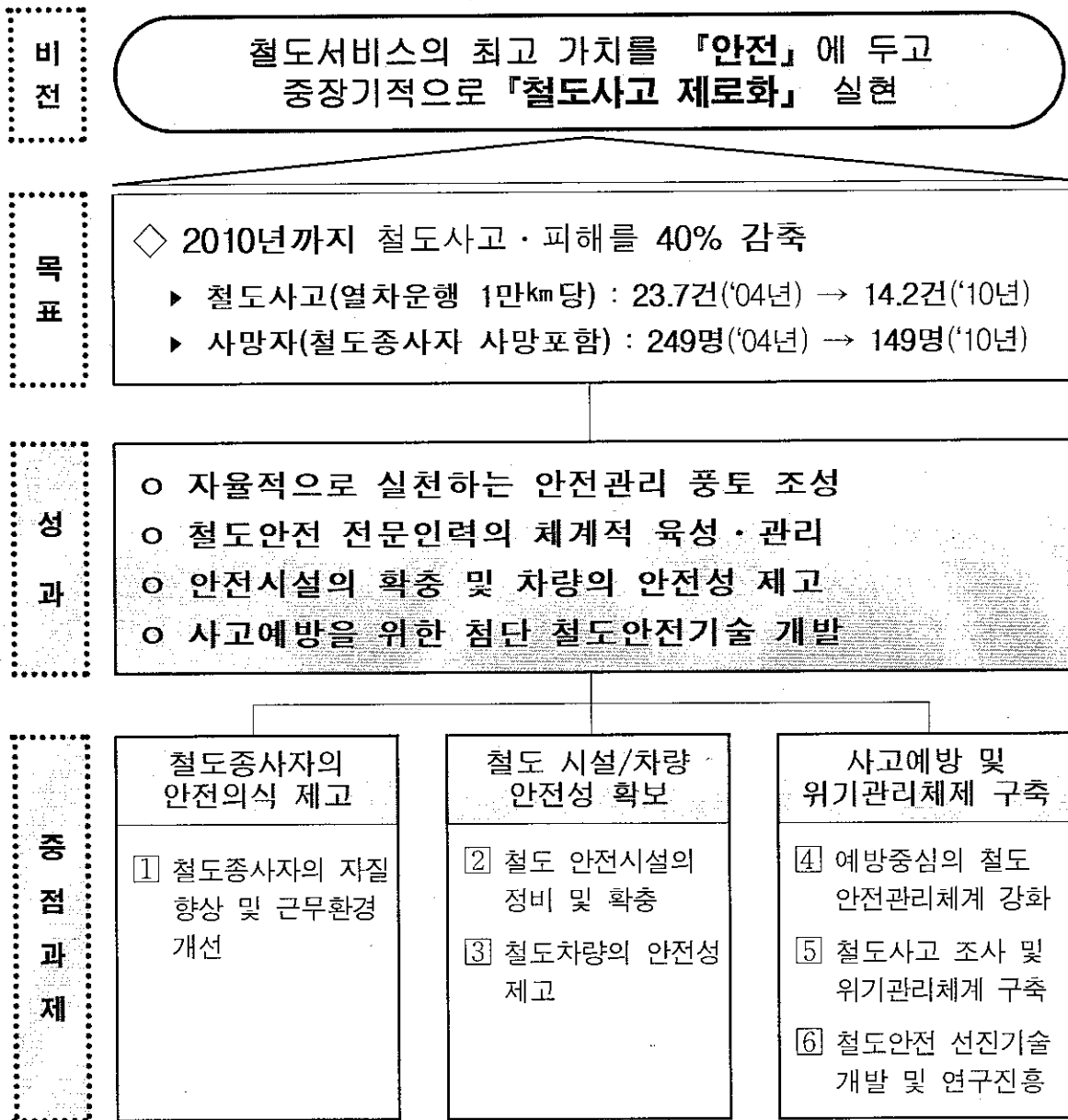
- 열차충돌·탈선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사고시 유관기관 연락·대피유도·사고복구 등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 미흡
- 철도현장 안전관리 활동이 인력중심으로 이루어져 사고·재해 등 발생시 사후 수습중심으로 대응
 -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한 예방중심 안전대책 한계
-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재정여건상 수익과 직접 연관이 적은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소극적

3.

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
□ 비전과 목표

- 「철도안전종합계획」을 통해 철도안전을 최고 서비스로 추구하여 중장기적으로 “철도사고 제로화” 실현



철도안전종합계획(2006 ~ 2010)

□ 주요 성과지표

	< 2004년 >		< 2010년 >
○ 철도운영기관 안전투자 :	2.3% (예산기준)	⇨	3.2%이상
○ 철도안전 교육 시간 :	10시간 (1인당/년)	⇨	20시간
○ 철도시설·차량 고장률 :	164건 (1만km당)	⇨	98건
○ 승강장 안전문 설치 :	3개소 (자하철역)	⇨	131개소
○ 철도건널목 운영 개소 :	1,577개소 (운영개소)	⇨	1,071개소
○ 철도안전 R&D 투자 :	13억원 (예산규모)	⇨	150억원

□ 추진전략

- 사고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분야별 대책수립
 - 철도종사자·철도시설·차량·위기관리·안전시스템 및 연구개발 등 6개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(77개) 발굴
- 사고후 재발방지책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‘사전에방의 원칙’을 적용하여 일상적 안전관리 및 투자로 전환
 - ※ 대규모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사후방식은 재원도 많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반인권적·후진적 특성
-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시책과 철도운영기관의 자체 추진과제를 연계하여 체계적 철도안전관리 강화
 -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안전도를 엄격히 평가하고, 예방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소지를 최소화

4.

주요 추진과제

①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

- '06년 하반기부터 기관사의 자질개선을 위한 '운전면허제'를 시행하고, 관제사 신체검사(2년주기)·적성검사(10년주기) 강화
 - ※ '06.11월 제1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실시(300여명)
- 대학·연구원 등과 연계한 철도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철도안전 교육기관 지정 및 전문화 지원
-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현장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접근경보기, 안전울타리 등 안전설비 설치
 - 작업현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안전진단시스템 개발

②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

- '10년까지 전국 466개 철도건널목을 입체교차화(건널목개소 감소 1,537→1,071)하고, 지장물 검지장치 등 첨단 보안장비 확대
 - 농어촌도로 입체화 촉진을 위해 「건널목개량촉진법」 개정
- 사고예방을 위해 선로변 울타리(201km) 설치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(131개소)·안전펜스(175개소) 등 안전설비를 단계적 확충
- 지하역사내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설비(제연·배연설비), 전기시설(비상전원공급선 등), 통신설비 등 방재시설 개선
- 터널·교량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·개량하고, 1km이상 터널(75개)내 방재설비를 연차적 보강

③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

- 20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,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개조·성능 개선
 - ※ '10년까지 노후대체 수요 : 1,072량(전동차 720량, 화물차 352량)
- 열차화재에 대비한 전동차내장재 교체사업(5,996량)은 '0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,
 - ※ 차량내장판·흡음단열재·바닥재·의자·인터폰 증설 등 개선
 - 역무실·관제실 및 차량간 다자간 통합무선망(TRS) 구축
- 철도차량 제작검사·성능시험 및 노후화된 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시행('06.7)으로 차량 안전성 검증 강화
- 노후화된 정비시설(5개소)은 자동 고장진단기능 등 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화된 정비시설로 개량

④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 감독 강화

-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실태에 대해 2년마다 종합심사 실시
 - 철도건설·개량시 시설물 검증시험·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 운행 절차 지침 마련('06)
-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설비기준,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 등을 규격화하는 등 위험물 운송시 안전관리지침 규정화('06)
- 홍수 및 지진 등 재해에 대비, 철도교량 홍수위 감지시스템과 고속선로변 지진계측기 등 첨단 조기경보설비 단계적 설치
 - ※ '06년까지 광명~대구간(21개소) 지진계측기 우선 설치하고, 대구~부산 구간은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반영('07~'10)

5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

-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 설치('06.7)
 - ※ 기존 항공사고조사위원회('02.8)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('05.7)를 통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- 사고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련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조사업무 지침서 수립·활용
- 철도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철도사고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
- 고속철도 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('06)하고, 유관기관을 포함한 종합훈련(연1회이상) 정례화
- 열차사고 모의체험 등을 위한 철도안전 교육장(1개소) 설치 및 철도안전홍보 및 전시회·문예활동 지원 등 안전문화 확산

6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

- 강풍, 낙석 등 재해 대비 선로구축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도건널목 신호체계 연동 등 지능화시스템 개발
- 기관사 직무능력 평가 시뮬레이터 및 충돌·탈선·화재 등 사고유형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분석기술 개발
- 철도안전도 평가를 위한 첨단 시험설비 구축

본 계획안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으며, 본 계획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

<참고1>

철도안전종합계획 투자소요

□ 2006~2010년간 투자소요액은 총 5조 197억원

- 정부지원 1조1,708억원 : 국유철도시설의 개량·유지보수사업 중 건널목개량, 전동차 내장재교체 등 안전관련 사업
- 자체충당 3조8,492억원 : 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조달(지방비포함)

<연차별 철도안전 투자계획>

(단위:억원)

구 분	계	2006	2007	2008	2009	2010
합 계	50,201	10,186	11,162	10,879	10,188	7,786
정부(출연금등)	11,709	2,488	2,588	2,448	2,179	2,006
철도운영기관등	38,492	7,698	8,574	8,431	8,009	5,780

□ 주요 투자사업(2006~2010)

	총사업비	(국고지원)
○ 스크린도어, 안전펜스 등 설치	: 10,996억원	(133억원)
○ 노후된 철도차량 교체	: 10,121억원	(없음)
○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	: 3,173억원	(2,380억원)
○ 터널방재설비 보강	: 1,763억원	(308억원)
○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	: 1,411억원	(25억원)
○ 전동차량 내장재교체	: 798억원	(415억원)
○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 기술개발	: 784억원	(784억원)
○ 작업장 안전설비 및 보호장비	: 601억원	(473억원)

<참고2>

철도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

□ 철도사고 현황('00~'04년간)

(단위:건)

구 분	2000	2001	2002	2003	2004	5년 평균
철도사고 계	755	706	703	908	788	772
열차사고 ¹⁾ (도시철도)	6 (1)	4 (0)	2 (0)	5 (1)	2 (0)	3.8 (0.4)
건널목사고 ²⁾	75	60	57	61	39	58.4
사상사고 ³⁾ (도시철도)	674 (118)	642 (130)	644 (107)	842 (197)	747 (172)	709.8 (144.8)
열차키로 (단위:100만km)	159.2	164.9	165.5	167.2	172.7 ⁴⁾	165.9
1만km당사고 (열차,건널목사고)	50.9	38.8	35.6	39.5	23.7	37.5

- 1) 열차간 충돌·선로 탈선, 열차내 화재 등으로 발생한 사고
- 2) 건널목에서 열차와 자동차 등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(열차사고 제외)
- 3) 열차이용객, 일반시민 등이 열차와 부딪히거나 역구내에서 발생한 사상사고
- 4) '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열차운행 거리 증가

□ 인명피해 현황('00~'04년간)

(단위:명)

구 분	2000	2001	2002	2003	2004	5년 평균
계	631	574	633	1,290 ¹⁾	671 ²⁾	759.8
사망자	264	258	273	513	249	311.4
부상자	367	316	360	777	422	448.4

- 1)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포함(사망 192명, 부상 147명)
- 2) 2004년도 고속철도 운행중 발생한 사상자 40명 포함(사망 17명, 부상 23명)

<참고3>

주요 성과 지표

○ 2010년까지 철도사고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주요 성과지표

구 분	성 과 지 표			비 고
	지 표 내 용	'04년	'10년	
자율 안전관리 풍 토 조 성	· 철도운영기관 직무사상사고 (전체 사고건수)	152건	91건	40%감
	· 철도운영기관 안전투자율 (총예산 대비)	2.3%	3.2%	최소투자율 40%증
전 문 인 력 육성 · 관 리	·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취득자 (전체 취득자 비율)	0%	50%	운전, 시설, 전기, 신호등
	· 철도안전 교육시간 (기관별 1인 평균시간)	10시간	20시간	최소시간 100%증
시 설 및 차 량 안 전 성 제 고	· 철도시설 고장률 (열차운행 1만km당)	44건	26건	40%감
	· 철도차량 고장률 (열차운행 1만km당)	119건	71건	40%감
	· 철도건널목 운영개소 (전체 개소)	1,577개소	1,111개소	건널목 설치 억제/제거
	· 지하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(전체 역사)	3개소	131개소	도시철도 역사
철도안전기술 개 발 확 대	· 안전기술개발 예산 (예산규모)	13억원	150억원	

<참고4>

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

제 1 분야 :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(13)

27대 중점과제	77개 세부과제	추진기간	주 관
1-1 철도운전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	○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·시행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교통안전공단
	○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운영기관
	○ 사고경력자 및 초급경력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1-2 철도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	○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·학·연 프로그램 개발	'08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·지원	'08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	○ 철도시설·차량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 시행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1-3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확립	○ 철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마련	'06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	○ 철도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	'07~'10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·평가제 도입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	○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활동 역량 강화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1-4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	○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	'08~'09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
	○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·보급	'06~'10	· 철도시설공단 · 철도운영기관
	○ 열차운행선 공사사고의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	'06~'09	· 철도시설공단 · 철도운영기관

제 2 분야 :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(13)

27대 중점과제	77개 세부과제	추진일정	주 관
2-1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관리 강화	○ 사고근절을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속 추진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해당 지자체
	○ 철도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및 개선	'06~'10	·철도시설공단
	○ 건널목 입체화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	'06	·건교부 (철도안전팀)
2-2 승강장 스크린 도어 등 안전 설비 확대	○ 승강장 스크린도어·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확충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	○ 선로변 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확대	'06~'08	·철도시설공단
2-3 지하역사 및 터널내 방재설비 개선	○ 지하역사내 송수관등 소방설비 설치 확대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	○ 터널 방재설비 보강계획 수립·시행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2-4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량 및 방재시스템 구축	○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	○ 재해대비 철도교량감시시스템 구축	'08~'10	·철도시설공단
	○ 지진 조기감지·경보시스템 구축	'06~'10	·철도시설공단
2-5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화	○ 선로 등 노후시설물 교체·개량 지속 시행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	○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장비 도입 확대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 체계화	'06~'10	·철도시설공단 ·철도운영기관

제 3 분야 :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(16)

27대 중점과제	77개 세부과제	추진일정	주 관
3-1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및 평가절차 정비	○ 철도차량 안전기준 항목별 세부기준 정비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철도차량 안정성 검증 절차 마련	'07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·평가 절차 시행	'07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3-2 철도차량의 현대화 및 성능개선	○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·시행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사업 추진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3-3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	○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등 방재사업 지속 추진	'06~'10	· 건교부(철도산업팀, 도시철도팀) · 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·적용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역무실·관제실 및 열차간 다자간 통신망 구축	'06~'10	· 철도시설공단 · 철도운영기관
3-4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	○ 철도차량 운행전 성능시험 제도 시행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철도차량 제작시 제작검사 제도 시행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노후 철도차량 운행시 정밀진단 의무화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철도차량 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3-5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·체계화	○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의무화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차량검수시설 보강 및 검수장비 현대화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	○ 통계 기반의 차량 관리 및 예방정비 체계 구축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차량 주요 부품 품질확보계획 마련·시행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
제 4 분야 :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(11)

27대 중점과제	77개 세부과제	추진일정	주 관
4-1 철도종합안전 심사체계 구축	○ 안전심사 기준 등 시행체계 마련	'06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
	○ 심사반 구성 및 전문성 확보	'06~'10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
	○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마련	'06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4-2 철도보호지구 및 종합시험운행 제도 개선	○ 철도보호지구 정비 및 지정·고시	'06~'08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시설공단
	○ 철도종합시험운행절차 도입·시행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4-3 철도위험물 안전 운송체계 선진화	○ 위험물 안전운송시스템 구축	'06~'08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	○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기준 마련	'06~'08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	○ 위험물 철도운송사고 평가시스템 개발	'06~'07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4-4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	○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시행체계 구축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표준화·품질인증 심의기구 구성·운영	'06~'10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
제 5 분야 :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(14)

27대 중점과제	77개 세부과제	추진일정	주 관
5-1 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·효율성 강화	○ 철도사고 조사관련 교육·훈련 프로 그램 개발	'06~'10.	· 건교부 (조사위원회)
	○ 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	'06	· 건교부 (조사위원회)
	○ 철도사고 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	'06~'10	· 건교부 (조사위원회)
5-2 철도사고의 과학적 관리체계 강화	○ 철도사고 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	'06~'07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	○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	'06~'08	· 건교부 (철도산업팀)
	○ 철도사고 백서 발간	'07~'10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5-3 사고수습· 복구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	○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현장운영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현장내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	○ 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
5-4 철도테러에 대비한 보안대책 강화	○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장비 개선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	○ 테러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의 효율화	'06~'10	· 철도운영기관
5-5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	○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	'06~'10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 · 철도운영기관
	○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 강화	'08~'10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
	○ 철도사고 전시회·문예활동 강화	'06~'10	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 · 철도운영기관

제 6 분야 :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진흥(10)

27대 중점과제	77개 세부과제	추진일정	주 관
6-1 인적 위험요소 관리기술 개발	○ 안전업무종사자 인적관리 및 업무 적성 평가기준 개발	'06~'07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6-2 철도시설· 차량의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	○ 철도시설·차량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연구	'06~'07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열차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기준 및 체계구축 연구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건물목 지능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6-3 철도 운행환경 안전관리기법 개발	○ 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· 운영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교통안전공단 (철도안전센터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사고시 피해저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 개발	'06~'07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고속철도 성능기준 및 안전체계 연구	'06	· 건교부 (고속철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6-4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기술 개발	○ 철도사고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	○ 충돌·탈선·화재 안전도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	'06~'09	· 건교부 (철도안전팀) · 철도기술연구원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방안

- 아웃소싱, 바우처, 민자유치 제도를 중심으로 -

2006. 2. 17

기 획 예 산 처

목 차

I. 시장원리 확대(MTMs)의 의미	1
II.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활용 필요성	2
III. 우리나라의 활용현황 및 평가	3
V.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방안	7
VI. 추진전략 및 일정	9

I. 시장원리 확대(MTMs)의 의미

◇ 공공부문에 경쟁, 선택,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·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아웃소싱·바우처·민자유치 제도 확대 추진

① 경쟁·선택·참여 등 시장경제의 효율적 기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정부조치를 의미

○ OECD 국가는 '80년대부터 MTMs(MarketType Mechanisms)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와 질적 개선을 도모

② 선진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원리 도입방식으로 아웃소싱, 바우처, 민자유치 등이 있음

	아웃소싱	바우처	민자유치
주요 시장원리	경쟁	선택	참여
서비스 공급 주체 변화	· 정부 → 민간	· 정부 → 민간· 정부 경쟁	· 정부 → 민간
서비스 성격	· 정부업무이지만, 민간에서 대행가능	· 주택, 보육,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	· 공공재이지만, 민간에서도 공급가능
계약당사자	· 정부와 민간업체	· 정부와 개인	· 정부와 민간업체
비용부담	· 정부	· 정부	· 이용자

II.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활용 필요성

① 공공부문의 비효율 요인 상존

- 지금까지의 정부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,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미흡한 수준
- 공공부문은 독점성으로 인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미흡
 -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공급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수요자에 부응하는 서비스 미흡
 - *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공급 → 수요자가 민영 주택을 선택하여 입주토록 하는 경우에 비해 만족도 감소

② 민간의 성장과 서비스 공급능력 확충

- 민간시장은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 → 시장 활용의 유인
- 최근 수준 높은 서비스 수요에 부응, 민간시장에서 공공적 서비스를 판매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간 경합
 - * 그동안 정부의 고유기능으로 여겨왔던 치안·경비 등의 서비스도 SECOM, KT텔레캅 등 민간기업에서 공급

⇒ 선택·경쟁·참여라는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확대하기 위해 제2단계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

Ⅲ. 우리나라의 활용 현황 및 평가

① (활용현황)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, 민자유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, 바우처는 최근에 들어 도입에 관심

① (아웃소싱) '99년 예산편성 10대 지침의 하나로 선정되어 시설관리·전산 등의 단순집행업무 분야에서 적극 활용

(억원, 개, %)

	'00	'01	'02	'03	'04	'05	연평균 증가율
예산	1,003	1,488	1,516	2,215	2,784	2,984	24.4*
사업수(누계)	103	136	160	185	235	262	20.5

* 동 기간('00~'05) 중 일반회계 예산 연평균 증가율 : 8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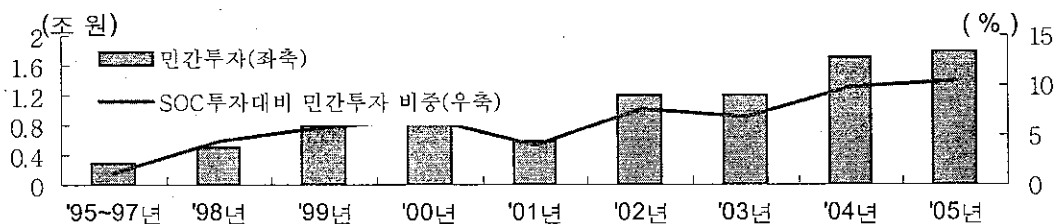
② (바우처) 아직까지 바우처 도입은 '걸음마 단계'

○ 보육('91), 직업훈련('98) 등 묵시적 바우처 형태로 도입되어 최근 명시적 바우처로 확대되는 추세

* 쿠폰을 직접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, 쿠폰 지급이 없는 묵시적 바우처, 우선 지출후 추후 환급받는 환급 바우처로 구분

사업(도입시기)	분야	형태	수혜자	공급자
보육('91)	보육	묵시적	저소득층 등	국공립, 민간보육시설
친환경 농업교육('05)	농업	명시적	농가	경상대, 농협대 등

③ (민자유치) '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BTO, BOO 방식을, '05년부터는 BTL 방식을 도입·추진



② (종합평가) 체계적인 관리·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선정의 객관성이나 사후관리가 미흡

① (아웃소싱) 체계적 관리 부족으로 효과 미미

○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쟁력을 갖춘 조사업무 등은 아웃소싱 이후 비용절감, 서비스 질 개선 등의 효과 발생

(예) 임업경영 실태조사('03년 산림청) : 아웃소싱으로 23% 비용절감, 전문적 조사수행으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

○ 청소 등 단순집행 업무는 고용불안만 야기 시켰을 뿐 실제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

② (바우처) 저소득층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도입 필요

○ 직업훈련 등 일부에서는 수요자 만족도가 높으나, 도입 여건에 대한 사전점검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사례도 발견

* 보육료 상한제의 폐지 없이 도입함에 따라 선택권 보장 효과는 미흡

○ 총괄기구가 없이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체계적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곤란

③ (민자유치) OECD 국가 못지않게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

○ 우선순위 낮은 사업의 추진, 교통수요 과다예측, 운영 수익 보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

<참고 1> 우리나라의 MTMs 활용 현황

구 분	아웃소싱	바우처	민자유치
도입 시기	· '99(예산안 편성지침)	· '91(저소득층 유아 보육료 지원)	· '94(민자유치법 제정)
근거 법령	·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	-	· 민자유치촉진법 ·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
대상	· 행정보조업무 · 단순집행업무	· 보육, 직업훈련, 문화 분야 등	· SOC시설 -도로, 철도, 항만 등
연간 규모 ('05)	· 2,984억원	· 7,914억원 -보육 : 2,671억원 -직업훈련 : 2,888억원	· 37.4조원(누계 기준) - BTO : 33.6조(협약) - BTL : 3.8조(고시)
사업 건수 ('05)	· 262개	· 7개 -보육, 직업훈련, 문화공연 관람 등	· 131개(누계 기준) - BTO : 45개 - BTL : 86개
활용 수준	· 보완·발전이 필요한 중간단계	· 초보 단계	· 활발한 이용 단계

< 참고 2 > OECD 국가의 MTMs 활용 현황

① (아웃소싱) 미국, 영국, 호주 등은 단순업무(시설관리, 청소) 외에 정부고유업무(국방, 복지, 회계검사 등)까지 아웃소싱 활용

국 가	분 야(예시)
미국·영국(국방성), 뉴질랜드(해군)	군사훈련시설 운영
뉴질랜드(회계검사원)	회계검사
미국(Wisconsin주, Kansas주)	사회복지
호주(New South Wales), 캐나다(Ontario)	교정

② (바우처) 미국, 영국, 뉴질랜드 등은 사회복지·주택 등의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 도입·활용

국 가	분 야(예시)	서비스	수혜자
미국, 영국	보육	보육료 지원	저소득층
미국, 뉴질랜드	직업훈련	훈련비 지원	비진학 청소년
미국, 영국	주택	임대료 보조	저소득층
미국, 칠레	교육	사립학교 교육비	저소득층

③ (민자유치) '92년 영국에서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민자유치 제도를 도입·활용

국 가	분 야(예시)
영국, 프랑스 등 선진국	SOC, 학교, 병원, 군 막사
체코,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	SOC

IV.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도입방안

<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연계 >

(원칙1) 시장이 존재하는 분야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남는 여력은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집중

- 정부 → 민간 : 민영화, 민자유치 등을 통해 기능 이양
- 민간 → 정부 : 사회보장제도, 보건위생 등 정부기능 확대

(원칙2) 재정이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앞당겨 공급

(원칙3) 재정지원 방식도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

① 정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재분석 실시

-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, 민간이양 업무, 시장원리 도입 대상 업무로 구분

② 시장원리 도입사업 선정

- 선정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적합한 후보사업을 선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

【아웃소싱】 선진국의 경우 교도소 운영(영국, 호주), 응급구호 및 소방(덴마크), 회계감사(뉴질랜드)등

【바우처】 선진국의 경우 주택, 직업훈련 등

※ 민자유치는 활발한 이용단계 → 확대보다 운영 내실화에 초점

③ 운영방식 다양화

【아웃소싱】 민·관 경쟁시스템 도입

- 사업자 선정시 경쟁을 민간간에 국한하던 시스템에서 정부부문과 민간이 함께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

* 선진국의 「민·관 공동경쟁 시스템」

- 미국(competitive sourcing), 일본(시장화 테스트) 등 투명·공정한 경쟁조건으로 관·민 경쟁 입찰을 실시, 가격과 질면에서 뛰어난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

【바우처】 쿠폰 지급/미지급, 비용환급 등 여러 형태 도입

- 환급 바우처는 수요자가 일단 지출한 후 비용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주택분야의 임대료 보전 등에 활용 가능

④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

【아웃소싱】

-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을 일괄 감축하기보다 신규인력 소요 발생시 이를 충원하는데 활용
- 아웃소싱 회사로 전직하더라도 보수·연금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웃소싱 협상시 패키지로 처리

【바우처】

- 기존 지원예산을 전환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 방지
- 독점적 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,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공유

⑤ 절차 및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

- 소관 부처는 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사업종료 후 집행결과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
- ⇒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 보고서는 기획예산처에 제출, 환류조치

【아웃소싱】

- 부처와 사업자간 서비스 질과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성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·점검

【마우처】

- 부처는 사전에 서비스 질, 절차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반기별 고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이행 여부를 점검

V. 추진전략 및 일정

① 추진전략

- (추진기구) ‘시장원리 확대 위원회(가칭)’을 설치·운영
 - 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설치,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 - * 위원장 : 기획예산처 차관, 위원 : 각 부처 1급 및 민간 전문가
 - 정부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 심의
- (단계적 실시) ‘06년에는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시행 부처를 선정, ‘07년에 1단계 시행
 - 1단계 시행성과를 점검한 이후 보완을 거쳐 전부처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
② 추진절차 및 일정

구 분	주요 추진내용	소관 및 협조부처	일 정
사 업 선 정	기본적인 사업계획 시달 (예산편성지침에 포함)	기획예산처 → 각 부처	'06. 3월말
	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·시달	기획예산처 → 각 부처	4월말
	대상사업 목록 및 해당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(예산요구시 함께 제출)	각 부처 → 기획예산처	5월말
	선시행부처 및 대상사업 선정 ('07예산(안)에 반영)	기획예산처	6~9월
집 행	선시행부처 실무자 교육	기획예산처	11~12월
	사업자 선정 및 집행	선시행 부처	'07. 1월~
평 가	중간 추진점검결과 작성·제출	선시행 부처→ 기획예산처	'07. 6월말
	성과평가 보고서 작성·제출	선시행 부처 → 기획예산처	'08. 1월말
	성과평가 결과 분석·환류	기획예산처	'08. 3월말